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10월 25일

제07-45호

##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의 정세와 전망

박복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위원 (bypark@kiep.go.kr, Tel: 3460-1149)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위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 주요 내용

- 2007년 10월 17일 터키의회가 이라크 북부에 은신한 쿠르드 반군을 소탕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면서, 쿠르드지역을 둘러싸고 관련국간에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 은신한 쿠르드 반군과 터키군의 무력충돌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한국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있는 아르빌이 소재한 곳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전후복구사업 및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기대가 높은 지역임.
- 현재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쿠르드족 독립저항운동과 관련된 지정학적 불확실성, 석유개발 및 분배와 관련된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주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Kirkuk)를 둘러싼 영토적 불확실성 등 3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임.

  - 지정학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터키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직접적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터키의 군사작전으로 터키군과 이라크에 은신한 터키계 쿠르드반군(PKK)간 무력충돌은 빈발하고 쿠르드자치정부 내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석유법을 둘러싼 종파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석유 관련 제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현재와 같이 독자적인 유전개발 계약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음.
  - 영토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키르쿠크의 쿠르드 지역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며, 이를 둘러싼 종파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쿠르드 지역 문제가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이라크 석유수출에 실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 우리기업의 쿠르드 지역 재건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여 진출을 결정해야 할 것임.

## 1. 배경

- 2007년 10월 17일 터키 의회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을 소탕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승인하면서, 이라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전체의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터키의 군사행동 시 이라크-터키 간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수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2003년 이라크전쟁 종전 이후 이라크의 각종 유혈충돌과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쿠르드 자치지역이 무력충돌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걸프전 이후의 이라크 상황은 부표 참조).
- 특히 쿠르드 지역 중 하나인 아르빌에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있고, 이를 계기로 전후복구사업 및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기대가 높은 지역이라 우리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음.
-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은 내전에 휩싸인 이라크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안정된 치안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터키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포함하여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라크는 다수 시아파 아랍인(약 60%)과 소수 수니파 아랍인(약 20%), 그리고 소수의 쿠르드족(약 17%)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쿠르드족 거주지역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실질적인 자치지역이 되었음.
- 3개의 주로 구성된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은 현재 쿠르드 자치정부(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쿠르드 자치지역에 관한 내용은 글상자 1 참고).
- 본 보고서에서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지정학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확실성, 영토적 불확실성의 3가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전망 및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글상자 1.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개황

- **면적:** 83,043km<sup>2</sup>(이라크 전체 면적의 19%)
- **인구:** 460만 명(이라크 전체 인구의 17%)
  - 아르빌 주 130만 명, 슐레마니아 주 150만 명, 다후크 주 80만 명
- **종교:** 이슬람 수니파 94%, 시아파·기독교 등 6%
- **종족:** 대부분이 쿠르드족으로 800여 개의 부족으로 구성
- **언어:** 쿠르드어, 아랍어가 공식어이며 영어도 통용
- **정치:** 자치정부체제(KRG: Kurdish Regional Government)로 운영
  - 아르빌 주, 다후크 주: 쿠르드민주당(KDP) 집권
  - 슐레마니아 주: 쿠르드애국동맹(PUK) 집권
  - ※ 현재 PUK의 잘랄 탈라바니는 이라크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며, KDP의 마수드 바르자니는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으로 재임
- **경제:** GDP 규모는 이라크 전체의 16% 수준인 약 60억 달러로 추정
  - 연간 수입액은 약 50억 달러로 추정
  - 후세인 정권의 소외정책으로 제조업은 전무하며 농업이 주류
- **석유:** 이라크 전체 매장량(1,150억 배럴)의 3%인 약 35억 배럴 보유

## 2.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의 3대 불확실 요인

### 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 현재 약 2,500만~3,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쿠르드족은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달성하지 못한 세계 최대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라크 북부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을 야기한 근본적 원인임.
- 쿠르드족은 이라크·터키·이란 국경 산악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전체의 약 55%에 해당하는 1,400만 명이 터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란에 600만 명, 이라크에 460만 명, 시리아에 10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들은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해체된 20세기 초 이후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외교적 노력과 무력항쟁을 끊임없이 벌였지만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 노력에 대해서는 글상자 2 참고).
-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 이란, 이라크 등은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운동을 철저히 억압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988년 생화학무기를 이용하여 수천 명의 쿠르드인을 학살한 바 있음.

그림 1. 쿠르드족 분포 및 자치지역



자료: 한겨레(2007년 1월 28일)

### 글상자 2.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 노력

쿠르드족은 기원전 2000년경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계 백인혈통의 산악민족으로, 이라크 북부와 터키 동남부, 이란 북서부, 시리아 북동부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세계 최대 소수민족이다. 과거부터 쿠르드족은 민족국가 내지는 자치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고 영국과 프랑스 등에 의해 오늘날의 터키·이라크·이란·시리아 간 국경이 확정되면서 쿠르드족 거주 지역은 이들 국경에 의해 강제 분할된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쿠르드족은 소련의 비호하에 이란에서 쿠르드 공화국을 창설하였으나 소련군이 이란에서 철수하면서 쿠르드 공화국은 1년 만에 무너지고 만다. 이후에도 이라크에 기반을 둔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 터키에 기반을 둔 쿠르디스탄노동당(PKK)과 쿠르디스탄사회당(PSK), 이란에 기반을 둔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디스탄부흥위원회(KZK) 등이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재 쿠르드족 자치·독립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곳은 이라크 쿠르드족이다. 1990년 1차 걸프전을 계기로 봉기한 쿠르드족은 1992년 이라크 내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쿠르드 독립운동가 출신인 PUK의 잘랄 탈라바니가 이라크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쿠르드족의 정치력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강력한 자치권 획득으로 주변국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라크 북부 산악지역이 쿠르드족 분리주의자의 근거지가 되면서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의 지정학적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음.
-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 은거하고 있는 터키 내 쿠르드 분리주의 반군 3천여 명을 소탕하기 위해, 터키 의회가 이라크 국경으로 진입하는 군사행동계획을 승인한 것이 최근 위기감 고조의 직접적 원인임.
- 이 문제의 핵심적 관건은 터키의 군사행동 실행가능성, 이에 대한 쿠르드 자치정부(KRG)의 대응,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반응 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최악의 시나리오는 터키가 대규모 소탕작전을 감행하고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에 반발함으로써 터키와 쿠르드족 전체의 무력충돌로 발전하는 경우임.
- 따라서 이 문제의 향후 전망은 터키의 결정, 쿠르드 자치정부의 대응, 미국 등 관련국의 반응에 달려 있는데, 현재 당사국 및 관련국의 내부 사정 및 입장은 다음과 같음.

#### ① 터키

- 전체 인구의 약 20%가 쿠르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터키는 기본적으로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을 강력히 억압해 왔지만, 최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정치·경제적 독립성 획득으로 자국내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 고무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하지만 군사행동 실행에 있어 집권정부와 군부 사이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으며, 최근의 의회 표결은 군부의 압력과 대중의 정서를 고려한 국내 정치의 성격이 짙음.
  - 터키 내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PKK) 소속 반군들과의 무력충돌로 최근 10월 초에는 13명의 터키 군인이 사망하였음.
  - 집권 이슬람 정부가 최근 이슬람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군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군부는 PKK에 대한 더욱 단호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음.
- 집권 세력은 결의안은 통과시켰지만 대규모 군사행동을 실제로 승인할 가능성은 낮으며, 과거 수차례의 작전 경험에 비춰볼 때 반군 소탕작전의 성공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군부는 최근 이라크 북부 국경선 근처로 병력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작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②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 이라크 내 쿠르드족은 내면적으로는 독립국의 창설을 열망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연방제형 이라크 체제 내에서 중앙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최대한의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5년 1월 쿠르드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5%가 독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지도자들은 독립을 추진하는 대신 자치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쿠르드족인 자랄 탈라바니(Jalal Talabani)는 이라크 신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활동
- 쿠르드족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후세인 축출을 위해 미군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지금도 이라크 치안 확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안보와 자치권을 보장받으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
- 1946년 이후 쿠르드의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조직인 ‘페쉬메르가(Peshmerga)’는 후세인 축출과 전후 치안 확보에 있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군이며, 이를 통해 20만 명에 이르는 독립적 무장조직을 합법적으로 유지
- 쿠르드자치정부는 PKK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PKK에 대해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어, 터키와 이란 등 주변국은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이 쿠르드반군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음.
- 한편 쿠르드 자치정부는 터키가 군사작전을 위해 월경할 경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주민들도 터키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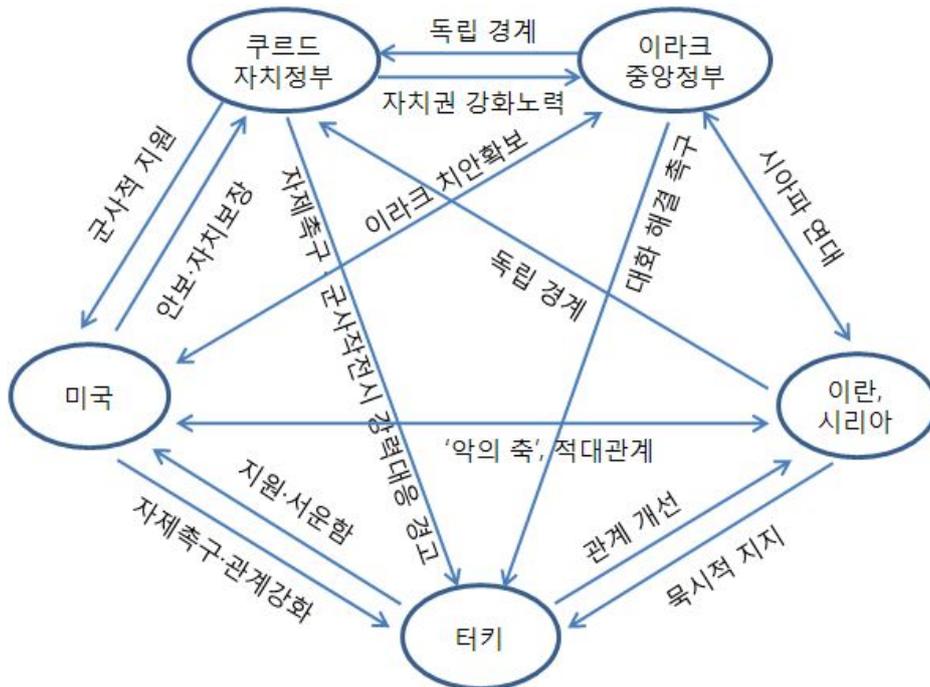
## ③ 이라크 중앙정부와 아랍인

- 이라크 중앙정부는 PKK 문제와 관련하여 터키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PKK 축출을 위해 터키와 협의해 왔지만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음.
- 이라크 내 아랍인들은 쿠르드족 전체에 대해 강한 정서적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쿠르드족이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음.

④ 미국 등 기타 관련국

-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주요 동맹국인 터키와 이라크 쿠르드족 양쪽 모두를 지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터키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음.
- o 이라크 주둔 미군 물자의 75%가 터키를 통해서 반입되는 등 터키는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데, 최근 미 하원외교위원회의 ‘아르메니아 학살 비판결의안’ 통과와 터키의 군사행동 결의안 등으로 현재 양국관계가 불편한 상황임.
- 주변국인 이란과 시리아는 자국 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의 군사행동에 반대하지 않는데, 특히 이란은 이란 출신 쿠르드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이라크 북부에 진입한 바 있음.

그림 2.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상호관계



자료: 필자 작성.

나. 경제적 불확실성

- 쿠르드 자치지역의 치안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경제사정은 여전히 취약하며, 경제적 안정의 달성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데 이는 주로 석유개발을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에 기인함.

- 쿠르드 지역은 이라크 전체 석유매장량 1,150억 배럴(세계 3위)의 3% 수준인 약 35억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자치지역 내에서는 이라크 전체 생산량(190만 배럴/일)의 2%인 하루 3만 배럴 정도만 생산되고 있음.
- 현재 쿠르드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석유수익교부금을 제외하면 다른 재정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마저도 법에서 정한 전체 수익의 17%에 훨씬 못 미치는 10% 정도만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정부수입의 80% 이상이 공무원 보수로 지급되고 있어 재건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전혀 없으며, 징세체계나 금융제도 등 경제운영의 기본체계도 아직 미비한 상태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정부는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역내 석유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벽에 부딪혀 있음.

표 1. 이라크 정부의 재정 현황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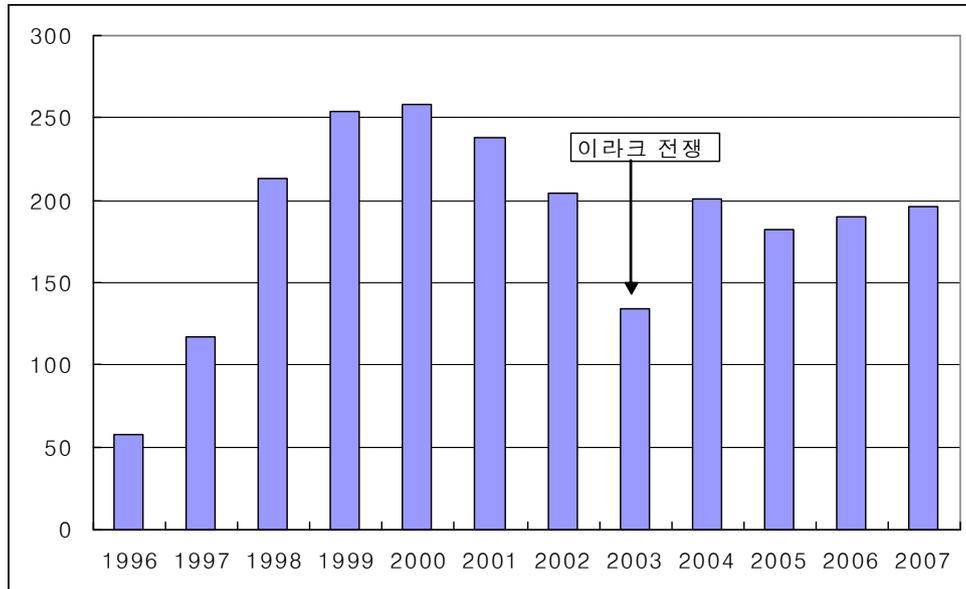
	2005년	2006년
총수입	249	354
원유수출	230	314
세금	3	4
세금외수입	5	11
원조	87	89
총지출	302	384
경상지출	241	307
투자지출	61	71
재정수지(원조 포함)	34	59
재정수지(원조 제외)	-53	-30

주: 이라크 디나르를 연평균 환율로 환산한 것임.

자료: EIU.

그림 3. 이라크의 석유생산량

(단위: 만 배럴/일)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신규유전의 개발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쿠르드족을 포함한 종파간의 갈등으로 국가차원의 '석유법' 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석유개발 관련 제도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
- 쿠르드 정부는 석유개발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을 주장하는 반면 아랍인, 특히 수니파 아랍인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음.
- 쿠르드 정부는 경제적 자율성 확보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의 편입을 예상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유전이 없는 중서부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수니파 아랍인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예상하여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2007년 2월에 각 종파간 타협으로 '석유법'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속조항이 첨가되면서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어 최종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초안에 따르면 강력한 연방석유가스위원회(FOGC: Federal oil and gas council)가 유전개발 계획을 평가하고 개발 계약을 설계하며, 지방정부는 구체적 협상과 개발계획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국가차원의 '석유법' 이 확정되지 않자 쿠르드 자치정부는 독자적인 석유법을 제정하여 유전 광구의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의 유효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며 종파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쿠르드 자치정부는 2005년 10월에 제정된 헌법 규정, 즉 '현재 운영 중인 유전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만 신규유전의 개발은 지역정부에 자율권을 준다' 는 규정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유전개발을 강행하고 있음.
- 자치정부는 2007년 8월에 자체적인 석유법 제정을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40여 개의 유전광구를 외국 석유회사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노르웨이 DNO, 미국 Hunt oil, 캐나다 Heritage, 프랑스 Perenco 등과는 이미 유전개발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다른 종파 특히 수니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위 계약들이 모두 향후 구성될 '연방석유가스위원회(FOGC)' 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다. 영토적 불확실성

- 쿠르드 자치정부는 현재 3개 주(아르빌, 다후크, 술레마니아)에 대해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외 인근지역에도 쿠르드인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Kirkuk)로, 향후 쿠르드족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편입여부를 둘러싸고 최근 이라크 내부와 주변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키르쿠크에는 이라크 전체 매장량의 10%수준인 약 1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 전쟁 직후부터 이 지역의 편입을 강하게 열망해 왔음.
- 하지만 아랍인들은 이 지역의 쿠르드 편입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쿠르드의 독자적 세력화와 경제력 강화를 우려하는 터키 등 주변국들도 편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후세인 시절에도 키르쿠크에 대한 쿠르드족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쿠르드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바 있음.

- 헌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키르쿠크 지역의 쿠르드 자치정부 편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며 심각한 종파간 갈등 소지가 있음.
- 헌법 140조에 따르면 2007년 7월 말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편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표를 위한 준비는 물론이고 투표가 주 단위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하위단위로 이루어질지 등도 결정되지 않고 있음.
- 후세인 시절 축출되었던 쿠르드인들이 다시 복귀하는 소위 '정상화' 과정에서 쿠르드 자치정부가 주민투표를 대비해 약 60만 명을 비정상적으로 전입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음.
- 올해 초부터 수니파 무장세력 등이 키르쿠크로 유입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무장충돌이 바그다드에 버금갈 정도로 빈발하면서 치안상황이 악화된 상태임.
- 쿠르드자치정부는 약속대로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006년 12월 미국의 'Iraq Study Group보고서'는 치안악화를 우려하여 주민투표 연기를 권고한 바 있음.

### 3. 전망 및 시사점

- 이라크 북부에서 터키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직접적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터키의 기습적 군사작전으로 터키군과 PKK 반군 간 무력충돌은 빈발하고 쿠르드자치정부 내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
- 터키 군부가 국내정서를 고려하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만, 본격적인 국경진입 시 이라크 중앙정부 및 자치정부와의 관계 악화와 자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장애, 미국 및 EU와의 관계 악화 등 부담도 따름.
- 하지만 제한된 범위의 작전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충돌이 쿠르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이라크의 석유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터키군의 잦은 국경선 침범은 오히려 쿠르드정부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 반(反)터키 정서가 고조되고 그 결과 대응책을 둘러싸고 쿠르드 내 정치세력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음.

- 석유법을 둘러싼 종파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쿠르드 정부는 현재와 같이 독자적인 유전개발 계약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음.
- 제도적 불확실성하에서 대규모 개발 계약은 이루어지기 힘들고 계약 후에도 실제 증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키르쿠크가 편입되지 않는 한 '5년 내 100만b/d 생산'이라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극도의 치안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이라크 전체의 석유생산 목표(2008년 300만b/d, 2009년 350만b/d, 2016년 600만b/d)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석유수익교부금에 의존하는 쿠르드 정부의 재정상황 역시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음.
- 키르쿠크의 쿠르드 지역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시기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며, 이를 둘러싼 종파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키르쿠크 문제와 석유 개발권한 문제가 쿠르드 정부와 다른 종파 사이에서 주고받기 형식으로 동시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된 핵심적 사안이 지금까지는 모호하게 타협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와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종파간 대립이 심화되고 쿠르드 지역의 불확실성도 표면화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쿠르드 정부의 자치권 범위, 유전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할, 키르쿠크의 편입 여부 등이 갈등의 핵심적 문제인데, 이는 신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일정 과정에서 헌법이나 석유법에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채 묻혀 있었음.
- 쿠르드 자치정부가 정치·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할수록 이에 대한 주변국 및 이라크 내 다른 종파의 경계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철군할 경우 미국에 의존하여 획득한 안보와 자치권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음.
- 최근 쿠르드 지역 문제가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이라크 석유 수출에 실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국제유가는 원유의 구조적인 공급능력 불안이나 금리·환율 같은 국제금융 요인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기업의 쿠르드 지역 재건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여 참여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쿠르드 자치정부의 재정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석유수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재건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으로 이루어진다면 리스크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부표. 전후 이라크 일지**

2003년	3월 20일	미 연합군 이라크 침공
	4월 9일	바그다드 함락,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5월 1일	부시 대통령 종전 선언
	12월14일	티크리트에서 사담 후세인 체포
2004년	4월 8일	이라크 저항세력 외국인 납치 첫 발생
	6월 28일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 이양
	12월 6일	시아파 주축 정당연합체 통합이라크연맹(UIA) 출범
2005년	1월 30일	이라크 제헌의회 선거 실시(UIA, 쿠르드족 승리, 수니파는 보이콧)
	4월 6일	의회, 잘랄 탈라바니(쿠르드애국동맹)를 대통령으로 선출
	4월 28일	의회, 자파리 총리의 과도내각 승인으로 과도정부 출범
	6월 14일	마수드 바르자니(쿠르드민주당),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 선출
	10월 15일	이라크 새 헌법안 국민투표
	10월 19일	후세인 두자일 주민 학살사건 관련 재판 시작
	10월 25일	헌법안 가결 선포
2006년	12월 15일	이라크 총선 실시(275개 의석 중 UIA(시아파)가 46.6%, 쿠르드연맹 19.3%, 수니파 20% 차지)
	2월 12일	UIA, 새 정부 총리 후보로 자파리 과도정부 총리 지명
	2월 22일	자파리 총리 지명에 반발한 수니파가 시아파 성지 사원 파괴
	4월 20일	자파리 총리 퇴진 발표
	4월 22일	의회, 탈라바니 과도정부 대통령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
	5월~6월	매달 100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각종 폭력으로 사망한다는 유엔 보고
	5월 20일	말리키(Nuri al-Maliki) 이라크 신임 총리 선출 및 신정부 출범
	12월 30일	사담 후세인 처형
2007년	1월 10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이라크 미군 2만 명 증원, 새 이라크 정책 발표
	4월 26일	미 상원,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안 가결
	5월 1일	부시 대통령, 의회의 미군 철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6월	이라크전 이후 미군 사망자 3,500명 기록

자료: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